

Hansun Brief

발행일: 2017년 6월 27일(통권45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억울한 쌍둥이 형제: 자사고와 4대강

천 세 영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00원으로 내 취향저격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 약

첫째, 자사고를 폐지하면 교육무한경쟁을 줄여서 학생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 한다. 과연 그럴까? 교육 무한경쟁이라는 단정 자체가 음울한 비난이다.

둘째,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살아날 것이라 한다. 오히려 일류학군 내 몇몇 일반고가 자사고를 대신할 것이다. 다시 일류학군 내 일류일반고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늘고 집값은 폭등할 것이다.

셋째, 자사고를 폐지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럴 리가 없다. 학교에 시험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교육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자사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넷째, 자사고를 폐지하면 입시위주교육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 한다.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자사고와 일반고는 모두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만 진학 대상 대학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 차이는 학생을 위한 당연하고도 당연한 맞춤형 교육이다.

다섯째, 자사고를 폐지하면 늘린 서민 대중에게 고른 교육기회가 보장될 것이라한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당장 일류 학군으로 이사는커녕 위장 전입 엄두도 못내는 서민 대중에게는 그나마 만들어진 작은 기회마저 날리고 말 것이다.

자사고와 4대강, 둘은 너무나 닮았다. 못 먹는 감 찌르기처럼 못된 사람들이 나서서 '없애겠다.', '물을 빼버리겠다.'고 난리 법석이다.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 뻔한데 이렇게 온 나라를 들쭉꾸시는 데는 남의 다리를 엉뚱하게 긁어대는 인간들의 무지함 탓이다. 폐지하고 난 다음에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생각은 해보았는가? 도대체 정부만 바뀌면 백년대계 교육정책은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버리는가? 정작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4대강 물빼기나 자사고 폐지 문제가 중국에 없던 일이 될 것인데 그 사이에 애꿎은 농민들과 어린 학생들만 실험실의 생쥐처럼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해야한다는 점이다.

한 번 생각해보자.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며 그런 허황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1. 자사고 폐지,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있다.

첫째, 자사고를 폐지하면 교육무한경쟁을 줄여서 학생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 한다. 허황된 거짓말이다. 교육 무한경쟁이란 구체적으로 입시경쟁을 의미할 것이며, 학생의 삶과 행복은 입시경쟁이 없는 상태의 그 무엇일 것이다. 교육 무한경쟁이라는 단정 자체가 음울한 비난이다. 경쟁 그 자체는 높이 살 일은 아니지만 삶 그자체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노력의 연속이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개인 간, 집단 간 노력을 이르는 말이다. 기실 그것이야말로 우주의 섭리이며 자연의 이치이고 인간 세상의 원리이다.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망상이 공산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입시경쟁의 불합리를 순화하여 선순환 교육경쟁을 만들려는 노력이 자사고라는 대용물을 탄생시켰으며, 궁극에 가서는 고교다양화 체제로 발전해가는 희망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둘째,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살아날 것이라 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맹모삼천의 지혜를 꺾을 수 없는 한 좋은 고등학교 지원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일류학군 내 몇몇 일반고가 자사고를 대신할 것인데, 다시 일류학군 내 일류일반고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늘고 집값은 폭등할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일류가 된 일반고는 또 다른 명분을 내세워 폐지해야 할 것이다. 소위 강남8학군 소동은 분당으로 겨우 빠져나가기 시작하던 교육수요를 고교평준화로 막아버린 데서 시작되었었지 않았는가.

셋째, 자사고를 폐지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럴 리가 없다. 사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몸부림이다.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불편한 진실은 교육수준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학교를 못 믿는 마음에 학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 학교에서는 서로 눈을 감기로 하고 학교 밖에서 각자 알아서 눈을 뜨기로 무언의 압력을 서로에게 가하고 있다. 학교에 시험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록 사교육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자사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넷째, 자사고를 폐지하면 입시위주교육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 한다.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자사고와 일반고를 방문하여 수업과 학생들의 삶을 하루만 관찰해 보면 금방 알 일이다. 자사고와 일반고는 모두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만 진학대상 대학이 서로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차이는 학생을 위한 당연하고도 당연한 맞춤형 교육일 뿐이다. 자사고의 선생님이나 일반고의 선생님 모두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다섯째, 자사고를 폐지하면 부자 기득권층에 늘린 서민 대중에게 고른 교육기회가 보장될 것이라한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당장 일류 학군으로 이사는 커녕 위장 전입 엄두도 못내는 서민 대중에게는 그나마 만들어진 작은 기회마저 날리고 말 것이다. 교육의 승고한 사명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뛰어넘는 데 있으며 인류 문명사와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학업성적에 대한 경제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유일무이한 비결은 학교와 선생님의 엄한 가르침 뿐이다.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서로 어울리는 곳이 학교이고 사회의 미래 모습이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서로 섞여 어울릴 것이라는 것이 오판인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자사고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몇몇 부잣집 공부 잘 하는 아이들마저 제주나 송도의 국제학교로 갈 것이고 잠시 멈췄던 조기유학 바람이 불 것이며 공부에 온 희망을 걸어온 가난한집 아이들은 동네 학교에서 고투해야할 것이다.

2. 고교평준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다시보자. 1974년 그리고 1968년 두 차례의 위대한 교육혁명이 있었다. 고교평준화와 중학교무시험입학이었다. 기실 그것은 막 동력이 붙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선물이었다. 해방직후 농지개혁으로 불붙었던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재가동되었다. 망국의 불명예를 지닌 조선은 인류사 최초 최고의 교육제도를 만들어냈다. 성균관과 향교라 불리는 중앙 및 지방의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는 과시라 불리는 정기적 평가를 시행하고 국가에서는 과거라 불리는 인재 선발 체제를 오백년 동안이나 유지했다. 그러나 부귀영화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의 교육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른 개혁에 실패하였으며 무서운 도전자들과의 싸움에 밀려 결국 망국의 원흉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갑오개혁으로 과거는 폐지되고 서양식 근대학교가 안방을 차지하였다.

불행하게 남은 자식은 교육열이라는 열병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입시경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대한민국 기적의 동력이었던 교육은 이제 대한민국 쇠락의 원흉이 될 처지에 놓였다. 기회는 있었다. 5.31교육개혁이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깃발 아래 열린 평생학습사회에 맞춘 교육체제의 다양화와 고교평준화 체제 탈피가 핵심 과제로 내세워졌다. 자사고는 그 산물이었다. 그러나 IMF외환위기가 왔고 우파 김영삼 정부는 좌파 김대중 정부로 바뀌었다.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우파좌파니 보수진보니 하는 지금처럼 첨예한 이념 분쟁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김대중 정부를 지나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이념 편향성은 진해졌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론 분열은 극에 달했다. 임진왜란마저도 정쟁으로 일삼은 조선 시대 사색당쟁과 같은 모습이다. 자사고의 불행은 이러한 정쟁의 역사와 함께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대표적 희생양이다. 아이러니는 김영삼 정부가 만든 5.31교육개혁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목소리 높여 추진했다고 자랑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던 시기에 개혁의 후퇴를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가 합법화한 전교조는 5.31교육개혁안에는 찬성하면서 고교다양화 정책의 하나로 제시된 자사고를 반대하고 나섰으며 결국 서울이 아닌 강원도의 민사고, 전북의 상산고 그리고 포항제철과 현대중공업이 세운 학교 등 전국 6개교로 시작하는 것으로 타협되었다.

그러나 평준화를 개선하고 다양화를 바라는 국가사회적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다. 과학고에 이어 외교 국제고등 특수목적고 등 다양한 고등학교들이 세워졌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사립학교가 먼저 나섰으나 지방 자치단체들은 너도 나도 앞 다투어 공립 외고들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자사고 전쟁이 일어났다. 다양화를 기치로 세워진 학교들에 대한 전교조 중심 좌파진보 진영에서의 비판과 폐지 요구는 설립되자마자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내내 그 강도는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때 세워진 자사고는 자율형사립고의 줄임말이다. 김대중 정부 때 세워진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자립형사립고와는 달리 광역단위 모집으로 제한되었으며 자율성 범위도 매우 제한되었다. 자사고 들은 물론 사회 일각에서도 절름발이 다양화라고 비판 하였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그리고 학교에게는 학생선발권을 전면 허용하는 교육의 자유 시대를 향한 진통이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불어 닥친 자 사고 폐지 정쟁은 과학고를 제외한 모든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과학고 국제고는 왜 거론을 않는지 생각해보면 그 배경도 의심스럽다.

4대강의 물을 빼듯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심산이며, 그에 멈추지 않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사립학교에 대한 대대적 통제를 예고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 난감한 공영형 사립대학 방안이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 누가 감히 교육을 국가가 독점하라고 했는가? 대원군의 서원 철폐와 일제의 사학통제가 왜 있었으며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남강 이승훈 선생의 오산학교를 필두로 한 수많은 민족사학들에 이어 해방직후 척박한 교육환경에서 국민의 교육열망을 담아낸 사립학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공로자들이다. 이처럼 국가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사학을 통제하여 도대체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자사고폐지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4대강에 물을 빼려다 낭패를 당하듯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어쩌면 속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광장의 열기로 밀어붙이고 있다. 제발 국가백년대계 교육이야말로 제일 원칙인 정책안

정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지금은 자사고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자사고를 만들 때이며 기존의 자사고에 더 많은 자율권을 허락하여 할 때이고, 궁극적으로는 학부모학생에게 학교선택권과 교육의 자유를 돌려주어야할 때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